

■ 책을 읽고 ■

박지현, 『비시, 잃어버린 역사는 없다』, 서강대학교출판부, 2014.

신 동 규

사람들이 행한 수많은 행위들은 우리의 인식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비록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그 모든 행위들이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지 아닌지는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박지현의 『비시 프랑스, 잃어버린 역사는 없다』는 어떨까? 카(Edward H. Carr)는 역사가에 의해 언급되는 과정을 강조하면서 역사적 사실이 되는 과정을 설명했고, 노라(Pierre Nora)는 미디어에 의해 사건화 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1972년 팩스톤(Robert Paxton)의 『비시 프랑스(La France de Vichy)』가 금기의 봉인을 풀었다면, 루소(Henry Rousso), 라크루와-리(Anni Lacroix-Riz), 르 크롬(Jean-Pierre Le Crom) 등의 역사가에 의해서 언급된 1940-1944년의 정부, 은행, 기업과 공장 등에 관한 이야기들은 비시 프랑스 시기 만들어진 사건들을 역사화 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중적으로 보급된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 항독 활동의 신화화가 이루어지면서 레지스탕스에 의해 토대가 닦인 제4공화국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것은 파시즘에 대항한 정의의 승리로 기억되었다. 그 과정에서 비시정부의 ‘민족혁명’을 추종했던 세력들이 행한 나치와의 협력은 하나의 ‘사건’으로 자리 잡았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협력이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레지스탕스의 영광도 ‘역사화’될 수 없었다. 즉 ‘비시 프랑스’는 하나의 사건이며 이미 역사화 되었다. 그러나 고의적인 ‘망각하기’와 의도적인 ‘기억하기’를 통한 역사적 사건의 정치적 선별화 과정은 이미 ‘역사화’된 사건을 역사적 논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오랫동안 가로막고 있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로 귀결되는 유대인 강제추방에 대한 ‘프랑스’의 책임소재 문제는 제3공화국-비시 정부-제4공화국-제5공화국으로 이어지는 프랑스 현대사에서 ‘비시 프랑스’ 문제를 끄집어 냈다. ‘절멸수용소’를 거쳐 강제추방으로 부터 살아 돌아온 자들의 존재 때문일까? 아니면 가족을 아우슈비츠로 보내고 남겨진 가족들의 존재 때문이었을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프랑스 혁명 이래로 보편적 인권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프랑스인들과 그들의 발명품인 공화국과 공화주의의 가치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어쨌든 프랑스는 비시 정부를 망각할 수 있었지만 유대인 문제는 기억해야만 했다. 결국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프랑스는 2005년 쇼아(Shoah) 기념관을 파리에 건립하면서 “프랑스의 이름”으로 유대인 학살로 귀결되는 강제추방에 대한 사과를 해야만 했다. 이 지점에서 박지현은 비시의 역사를 끄집어 낼 수밖에 없는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을 강조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역사는 없다’라는 제목에서 국가가 강제하는 집단기억에서는 배제되었지만, 비시 프랑스는 엄연히 기억 밖에 사실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1940-1944년 사이 만들어진 방대한 정부문서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일상의 기억들이 재구성 되면서 비시 시대는 역사화 되었으며, 적어도 로버트 팩스틴과 앙리 루소 이후에는 의도적인 배제(망각)와 기억 되살리기(역사화) 사이에서 비시 문제는 이야기 될 수밖에 없었다. “단절과 일탈의 역사”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비시 시대는 이렇게 “현재 프랑스인에게는 잃어버릴 수 없는 역사로 남았다”는 것이 이 책이 말하려는 바이다.

박지현은 비시의 역사를 ‘단절’과 ‘일탈’이 아닌 전쟁이라는 특수한 만들어낸 ‘연속’과 ‘타협’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저자는 친독 협력 문예지로 낙인찍히는 『신프랑스 잡지』의 재출간 당시, 나치의 선전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독일의 강요 이면에는 프랑스 ‘대작가’의 암묵적인 지원이 있었고 강조한다.(40쪽) 정간 후 독일에 협력한 번역작가들에 의해 재출간 되었던 『신프랑스 잡지』에 실린 프랑스 ‘대작가’들의 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숙청대상이 아니었던 이 작가들은 협력 문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작가의 요람’으로

추앙받는 전쟁 전의 『신프랑스 잡지』와 ‘반역작가의 문예지’로 낙인 찍힌 비시 시대의 『신프랑스 잡지』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보다는 대작가들의 펜에 실린 무게가 더욱 의미 있어 보인다. 1940년에서 1943년 사이 여전히 대작가들의 글터 였다는 사실이 가려진 채 1940-1943년에 발간된 『신프랑스 잡지』를 반역작가의 잡지로 규정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레지스탕스의 신화를 정당화 하는 집단기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아닐까? 이러한 질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1940-1943년 사이 발간된 『신프랑스 잡지』에 나타난 나치의 체제선전 전략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쉽게도 이번 연구에서는 다루어 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명확해 질 때 『신프랑스 잡지』에 실린 대작가들의 글들이 가지는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대작가들의 ‘타협’은 변하지 않는 사실로 남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 타협은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적 행위를 견인하는 윤리적 기준이었을 것이다. 숙청의 근거가 되지 않는 합리적 ‘일탈’로서….

〈노동현장〉에 기반을 둔 사회 공공 정책은 비시정부와 전후 프랑스 공화국과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공산당은 불법화되고 노동조합의 활동은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코포라티즘에 입각한 단일노조(Syndicat unique)는 노동총연맹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을 불가능하게 했다. 기업사회위원회(Comités sociaux d'entreprise)는 〈노동현장〉 정신에 입각하여 계급적 노동운동을 차단하고 노사화합을 이루기 위한 비시정부의 사회정책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노동현장〉을 반대하는 생디칼리스트들은 기업사회위원회를 통해 기업내의 합법적 활동을 추구했다. 리옹의 베를리에 같은 경우 가장 반노동자적 기업주로 손꼽히는 마리우스 베를리에(Marius Berliet)가 노사화합을 추구하는 비시정부에 반대해 기업사회위원회의 설치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데 반해, 레지스탕스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기업사회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기업사회위원회의 주된 업무인 기업복지는 전후 기업위원회(Comité d'entreprise)로 계승되었으며 기업 내 노동조합 활동이 합법화 되는

1968년 까지 노동조합의 기업 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었다. 1968년 이후에도 종업원 총투표로 실시되는 대표자 선출제도는 노동자에게 대표성을 부여하여 노조 가입율이 저조한 프랑스에서 기업 내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연속성에 대한 연구는 장-피에르 르 크롬이 비시의 사회정책과 전후 질서의 연관성을 강조 한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박지현의 연구도 바로 이러한 경향과 일치한다. 비시 정부의 사회정책은 노동 분야에서, 사회보건 분야에서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에 관한 박지현의 문제의식의 출발은 제3공화국의 교육체계가 사회계층에 따른 공교육의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시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제3공화국의 한계를 “공교육과 대중교육의 공식으로 풀어나가면서, 프랑스 공화국의 정치, 교육, 문화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한다.(202쪽) 또한 비시 정부가 카톨릭 교회의 종교활동을 허용하면서 제3공화국의 무상, 의무, 세속교육이라는 대원칙 중 라이시테를 포기하면서 공화주의적 교육정책과 단절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국가 주도형의 공교육 원칙은 비시 정부를 거쳐 오늘날 까지 유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주장하는 요지이다. 박지현은 이것을 단일한 청소년 문화를 양성하겠다는 민족혁명 정신과 공화주의적 공교육의 길항관계 속에서 보여준다. 비시 정부는 ‘자유, 평등, 우애’의 토대 위에 세워진 공화국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노동, 가정, 조국’이라는 민족혁명 정신을 통해 새로운 국가 체제 건설을 선동했지만, 두 개의 상이한 목표를 가진 정치 이념과는 상관없이 구체적 정책 실현은 하나의 경향으로 수렴되는 정책입안자들의 선택을 통해 제3공화국-비시정부-제4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만들어 냈다. 아마도 에피스테메(Episteme)의 작동 때문일까?

창원대학교, shindongkyu@changwon.ac.kr